

여야 합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靑 ‘월권’ 주장에 또 뒤틀리나

與 “국민동의 필요” 野 “9월중 처리 합의 지켜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4일 향후 논의와 처리 방향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여당은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공적연금 개선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국민연금 부분의 여야 합의에 대한 청와대의 ‘월권’ 주장이 나온 뒤에 여당의 태도가 바뀐 탓으로 사회적기후와 국회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제도 변

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으로 쓰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런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 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이처럼 국민연금 부문에 대한 여야 합의를 바꾸면서 여당과 청와대 간 불협화음은 점점 국면으로 접어들고 오히려 오는 9월을 시한으로 벌어질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협상을 앞두고 공조체제로 전환한 듯한 모양새다.

청와대는 여당에 대한 비판을 접었으며 박 대통령도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긴 했지만,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성격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물리적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해명하고 최고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불만을 잠재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립학교직원, 공무원보다 덜 내고 같은 연금 받나

여야 연금 개혁안 형평성 논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따라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그대로 놔두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 간에 연금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현행 사학연금법은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며 기여율을 7%로 명시했다. 또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

무원연금개혁특위 관계자는 4일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보다 덜 내면서 똑같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에서 공무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피하려면 사학연금법을 손질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아직 사학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완중 측근 “2012년 새누리 대선캠프 2억 전달”

홍준표 前보좌관 오늘 소환 1억원 수수 여부 조사

특별수사팀 소환조사 진술... 불법 대선자금 의혹 새국면

‘성완중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보좌관을 지낸 현직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나모씨를 5일 소환해 조사한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나씨에게 5일 오후 2시에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나올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나씨는 홍 지사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시점

인 2011년에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냈다. 검찰은 나씨를 상대로 당시 성 전 회장으로 부터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윤씨로부터 문제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이자 회사 재무관리를 총괄해온 ‘금고지기’ 한모(50) 전 부사장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소환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 지시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관계자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면서 “그 돈이 누구에게 건네져 사용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진술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게 2억 정도 줬다”고 밝힌 것과 미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수사팀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反개혁은 사익추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주제

박근혜 대통령이 1주일 간의 건강 추스르기를 끝내고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반(反)개혁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4·29 재보궐선거에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 의미를 규정하면서 ‘개혁이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했다.

즉,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정치개혁에 있는 만큼 민심을 거스르는 반(反)

개혁 정치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발언에는 성완중 파문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치개혁을 제시한 박 대통령의 보다 강화된 인식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1주일 만에 공식일정을 재개하는 자리에서 연금개혁 문제가 이슈로 부각한 상황임에도 거듭 ‘정치개혁’을 수차례 언급하고 강한 레토릭을 사용한 것은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개혁을 놓고 야권에서 ‘성완중 파문’ 물타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정치개혁 수용만이 해법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진박(진박근혜) 인사들이 ‘성완중 리스트’에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정치개혁’이란 원칙적 얘기만 함으로써 자신과 그들의 의욕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규정 지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오른쪽)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윤근 퇴임 소회 “연꽃 되고봤지만 흙탕물에 오염”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와 마지막 주례회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마지막 주례회동을 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중도하차로 지난해 10월 초 제1 야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우 원내대표가 오는 7일 임기를 마치게 되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월초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매우 우 원내대표와 마주앉아 국회 운영을 협의해왔다.

그동안 두 사람간 주례회동은 우 원내대표의 방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마지막 회동은 우 원내

대표의 ‘터전’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동은 3개월간 손발을 맞춰온 서로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우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함께 회의실에 입장한 뒤 카메라 앞에서 손을 잡고 선 뒤 “그동안 의회주의자이고 대화론자인 우 대표님의 면모를 주례회동과 비공공적인 여러 만남을 통해 확인하게 됐고 정말 존경하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진흙탕 같은 정치현실에서 연꽃처럼 해보려고 했다”고 회고했

다. 이어 “생각해보면 국민이 보기에 ‘우윤근도 별 수 없는 친구구나’ 할 정도로 많은 흙탕물에 오염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저 역시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 짝 못 나간 적이 있다”고 돌아본 뒤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여야가 진영논리에 싸우는 정쟁을 그치지 불가능하다”며 ‘개헌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러진 40분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계류법안 처리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사항 없이 마지막 회동을 마쳤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